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02-765-9731),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일 자 : 2014. 4. 1(화)
- 제 목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5가지 정책대안(주민번호 체제개편,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것은 해당 정책대안들의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회 미방위 의원을 대상으로는 현재 미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질의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3개 상임위 의원 총69명 중 27명(약 39%)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의원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으신 의원들께는 유감을 표합니다. 올바른 정책은 시민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사표시나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설문 답변율이 높지 않아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의 정책 대안에 공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5개 정책대안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금지(50%)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도(46%)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 전체 의원의 50% 가까운 의원들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제도’ 및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제도’ 등 미방위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문제점과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2월 심사소위에서 논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벌써 지방선거를 이유로 관련 현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본대책의 수립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4월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설문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별첨 1]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기간 : 2014.3.10. ~ 3.31
- 설문대상 : 국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 설문응답자수 및 비율 :
 - 정무위원회 : 24명 중 12명 (50%)
 - 안전행정위원회 : 22명 중 8명 (36%)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23명 중 7명 (30%)
- 3개 상임위 전체 : 69명 중 27명 (39%)

2. 설문답변 분석

■ 주민번호 체제개편

- 답변자 27명 중 22명 찬성 (81%)
- (무응답 포함) 전체 3개 상임위 의원 중 찬성 비율은 32% (68%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 무응답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 32% 이상은 찬성한다는 의미)

* 윤재옥 의원은 주민등록번호가 '현재도 필요에 따라 재발급이 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재발급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

- 답변자 27명 중 24명 찬성 (89%)
- (무응답 포함)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 의원 24명 중 12명 찬성 (50% - 즉, 50% 이상의 의원이 찬성한다는 의미)
- (무응답 포함) 전체 3개 상임위 의원 중 찬성 비율은 35% (65%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 무응답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 35% 이상은 찬성한다는 의미)

■ 소비자 집단소송제

- 답변자 27명 중 22명 찬성 (81%)
- (무응답 포함)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 의원 24명 중 11명 찬성 (46%)
- (무응답 포함) 전체 3개 상임위 의원 중 찬성 비율은 32% (68%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 무응답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 32% 이상은 찬성한다는 의미)

■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 답변자 27명 중 23명 찬성 (85%)
- (무응답 포함) 전체 3개 상임위 의원 중 찬성 비율은 33% (67%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 무응답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 33% 이상은 찬성한다는 의미)
- 여전히 의원들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박남춘 의원은 “제각각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를 폐지’ 하자는 것

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좋은 사람은 계속 사용하면 됨. 이상일 의원 역시 “그걸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폐지해도 무방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적, 선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동시에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다른 기술적 수단도 이미 존재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 답변자 27명 중 24명 찬성 (89%)
- (무응답 포함) 전체 3개 상임위 의원 중 찬성 비율은 35% (65%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 무응답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소 35% 이상은 찬성한다는 의미)

■ 이동통신 실명제(본인확인) 폐지

- 국회 미방위 의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답변자 7명 중 4명(유승희, 유성엽, 이상민, 최재천 의원)이 폐지에 찬성
- 이상민 의원은 “귀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이라고 밝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재논의 필요.

■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 질문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대한 찬성 여부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동의 여부인지 불분명해서 찬성/반대 비율을 판단하기 곤란함.
- 다만, 응답에서 최재천, 유승희, 이상민 의원등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동의를 표하였음.

[별첨 2] 설문 답변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설문답변 (12/24)

성명	정당	주민번호	금융지주법	집단소송	공인인증서	개보위강화
강기정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강석훈	새누리당					
김기식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김기준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김영주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김영환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김용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김중훈	새누리당					
민병두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박대동	새누리당					
박민식	새누리당					
성완중	새누리당					
송광호	새누리당					
송호창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동우	새누리당					
안덕수	새누리당	유보	찬성	유보	찬성	찬성
유일호	새누리당					
이상직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종걸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학영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호준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조원진	새누리당					

<답변 내용>

○ 김영주 의원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새로운 개인식별번호가 도입되어야 함.(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사회보장번호와 연동되어 4대보험 사각지대도 없애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 안덕수 의원

주민번호	주민번호와 관련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무작위 일련번호 대체는 신중한 검토 필요. -무작위 일련번호라 하더라도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가능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컨트롤 타워 및 이에 대한 암호화, 보안 등 보호 대책이 시급
집단소송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비자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선 검토하되, 집단 소송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은 검토 필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설문답변 (8/22)

성명	정당	주민번호	금융지주법	집단소송	공인인증서	개보위강화
강기윤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민기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김태환	새누리당					
김현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문희상	새정치연합					
박남춘	새정치연합	유보	찬성	찬성	유보	찬성
박덕흠	새누리당					
박성효	새누리당					
백재현	새정치연합					
서청원	새누리당					
유대운	새정치연합					
유승우	새누리당					
윤재옥	새누리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상규	통합진보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재오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유보	유보	유보	유보	유보
이찬열	새정치연합					
이해찬	새정치연합					
진선미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황영철	새누리당					
황인자	새누리당	유보	유보	유보	유보	유보

<답변 내용>

○ 박남춘 의원

주민번호	찬성 취지임. 다만, 현행 정부시스템상 주민번호 재발급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문제점에 대해 정확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됨. 문제가 없다면 변경도 고려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취지는 동의함. 다만, 제각각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윤재옥 의원

주민번호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찬성, 공공영역 최소한도 이용 찬성, 주민번호 무작위 일련번호 대체 찬성, 현재도 필요에 따라 재발급이 되고 있음, 이번 금융 사고에 따른 대규모 재발급은 반대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설문답변 (7/23)

성명	정당	주민번호	금융지주법	집단소송	공인인증서	개보위	폰실명제 폐지	전화정지
강동원	무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김기현	새누리당							
김을동	새누리당	찬성	찬성	유보	찬성	찬성	유보	유보
남경필	새누리당							
노웅래	새정치연합							
민병주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유성엽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유승희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유보
이상민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상일	새누리당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이석기	통진당							
이우현	새누리당							
임수경	새정치연합							
장병완	새정치연합							
전병헌	새정치연합							
조해진	새누리당							
최민희	새정치연합							
최원식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유보	유보
최재천	새정치연합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한선교	새누리당							
홍문종	새누리당							

<답변 내용>

○ 유승희 의원

전화정지	불법행위에 사용된 자동차라도 운행을 중지할 수 없듯이 전화번호 이용을 중단할 수도 없음
------	--

○ 이상민 의원

집 단 소 송 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하였음
전화정지	이용권 박탈과 통신의 비밀에 중대한 위협 등의

○ 이상일 의원

주민번호	개편 취지에 공감함.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신중함이 필요함.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치밀하게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위에 제시된 시민사회의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국민의 여론을 더 들어보는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임.
금 용 지 주 법	기업이 개인정보를 경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하되, 텔레마케팅(TM) 등과 같은 직접 영업활동에는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임.
집단소송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함. 그러나 소송 남발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함. 집단소송제 확대와 관련해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함.
공 인 인 증 서	공인인증서가 국제 온라인 거래에 있어 장애가 되고, 보안에 취약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걸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폐지해도 무방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적, 선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동시에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봄.
개보위 강 화	국회와 정부, 전문가 등이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폰 실 명 제 폐지	민간 자율 보안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와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화정지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필요는 있으나, 전화번호 정지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법행위와 무관한 영역까지 규제(정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원식 의원

<p>폰 실 명 제 폐지</p>	<p>미방위 행정실 확인결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아니하여 위원회 대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함. 본 의원은 귀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p>
<p>전화정지</p>	<p>미방위 행정실 확인결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아니하여 위원회 대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함. 본 의원은 귀 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p>

[별첨 3] 설문지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1,200만 명의 KT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통신사, 택배사, 쇼핑몰 등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 그것도 주민번호, 계좌정보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업체 및 통신사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이처럼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는 단지 해당 기업의 보안인식 부재와 기술적 대책의 미비로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부추기는 법제도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반과 환경에 취약점은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 혹은 기업들의 이익 보호에 여전히 치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민생 대책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해 다음과 질의하오니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이메일(raid1427@ccej.or.kr) 또는 팩스(02-741-8564)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 문의 : 경실련 윤철한 국장 010-3459-1109,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010-2213-9199

<설문 내용>

1. 주민번호 체제 개편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주민번호 때문입니다. 주민번호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열쇠(key)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높여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정보 사회 구축을 위해서, 주민번호 체제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주민번호 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통신을 비롯한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공공영역에서도 목적에 맞게 최소한도로 이용할 것 (사회 각 영역에서는 주민번호가 아닌 고유 목적에 맞는 별도의 식별체계 사용) 둘째, 주민번호를 무작위 일련번호로 대체할 것, 셋째, 주민번호는 필요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해야 하며, 우선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2.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금융지주회사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수집목적 외 사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원칙과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KB국민카드의 고객정보 5,300만 명 중 1,150만 명은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고객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가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유독 금융지주회사만 예외로 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의 공유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3.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정부가 내놓은 ‘징벌적 과징금’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관련’ 매출의 1%),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 배상과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이 확정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감당해야 할 부담을 높이는 한편, 피해 당사자가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4.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한국의 보안 환경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하여 이용자의 PC에 Active X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PC 등을 해킹 위협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보안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왔습니다.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것은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보안 위협을 높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공인인증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금융 보안 수단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보안에 대한 책임성과 투자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한 것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주요 기능은 안전행정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생성, 수집하고 집적, 이용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부적합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산업 진흥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범은 각 국에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둘 것과,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조정, 시정명령, 자료제출요구, 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6. 이동통신 실명제 폐지

위원회 대안은 휴대폰의 부정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통신 가입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실명제는 이동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870만명, 최근 1200만명의 KT 고객정보가 유출된 바와 같이 통신사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사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수많은 제휴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큼니다.

또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본인확인 정보와 결합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명의 설정 역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는 오히려 현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동통신 실명제를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7.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위원회 대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전화번호 회선이나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이용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화번호를 중지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은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시키는 요건에 있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와 무관한 영역까지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부 비판적인 표현이나 활동에 이용될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용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정보 내용탐지 등을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DPI(Deep Packet Inspection) 등의 기술적 조치를 도입한다면 이용자 통신의 비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